

이준석 리더십 시험대 재난지원금 번복 '맹공'

홍준표 "전국민 용돈 뿌리기" 김태흠 "월권 행위 자제"... 與 합의 이행 압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당 내 반발로 이를 번복한 일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정치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해 "100분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월권행위 자제하라" 등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조했다며 맹비난했다.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대해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책정하는 방향이 맞다. 전 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저는 그간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할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생존 자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제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준 것이다.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거세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옹호하고 나아가 통일부 폐지까지 주장해 당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원내와 상의도 없이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3선 중진인 김태흠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원내 당 대표로서 국회의 권한인 추경 편성까지 당내 의견 수렴 없이 합의하는 월권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통일부, 여가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옳지 않다. 아직도 정치평론가, 패널리스트 이겼지껏 가리지 않고 언급하면 당이 곤란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대표 때

리기에 가세했다. 안 대표는 "여당의 포퓰리즘 대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며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전형적인 선심성 대표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그동안의 제1야당 입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쓴소리를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 대표도 40%가 아니고 80% 지원할 바에는 선별하느라 논란이 너무 많아 100% 지원이 맞다고 말했고 저도 동의했다. 잘 합의했는데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 안타깝다"며 "이걸 가지고 이 대표를 욕박지르는 것은 올바른 야당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100분만에 말 뒤집는 100분대표, 탕자 대표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당대표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 청년 세대와 신의도 저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요지부동 홍남기 "전국민 지급 반대...재정, 정치 따를 것 아냐"

"하위 80% 재난지원금 적정하다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움직임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이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80%, 100%에 대해 국민도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소득 하위 80%를 제시했으면 국회, 국민도 납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놓으니 국회에서도 대립하는 거라고 본다"고 질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가입자나 선정기준을 검토하

고 있다"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2019년도로 돼 있는 부분은 2020년도 (소득이 줄어든 내 용을) 신고하면 (지원대상)에 가산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반영된 최근 소득은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원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대표가 논의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해 발표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 보상을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경전도 벌어졌다. 우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으니 전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느냐"며 "100분 만에 깨지기도 했지만, 여야 대표가 모처럼 모여서 시원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건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시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쪽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정치가 내는 기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해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하위계층에 취약할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에 주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원님과 견해가 다르다"고 도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는 지적에 "선진국보다 재정투입이 적은 것은 맞으나 재정 증가 속도를 본다면 결코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다"며 "금융을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민주당 양향자 의원 제명 위기 광주정가 술렁



보좌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결정하자 광주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3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

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의 보고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 총회가 언제 열릴지, 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계

안이 그대로 가결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 의원의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최종 결정되면 지역 정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광주 8석 전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석이 줄어들고, 광주서구를 지역위원회는 사고위원회로 분류돼 대행체제 가능성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서구정장과 서구를 지역 지방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구가 술렁술렁하다.

서선욱기자

2주 만에 다시 만난 국힘-국당

성일종 "野플랫폼 개방적 논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이 13일 2주 만에 다시 동뚝했다.

양측은 당초 매주 회의를 열고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첫 회동 이후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하지는 취지에서 한 주간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당 측 실무협상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당 기구·대통령 선출 규정에 대한 추가 조정 ▲정강 정책 변경 등 합의된 사안은 소위를 구성해 개정 논의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통령 선출 규정을 조정한다는 것은 선출 시기와의 관련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 당의 대통령 선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선

출 시기와 선출 방법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정이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야권의 플랫폼을 현재 우리 당의 경준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런 야권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당에서 오늘 주신 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경준위와도 협의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